




2008 시민교육 국제회의의 의미와 과제

글 · 임선희 carreau@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에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다소 불충분하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입시 위주 제도 속의 학교 교실’ 안에서 ‘민주 시민교육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회의를 통해 본 시민교육의 과제

대한민국 시민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학교 영역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비중 있는 차원으로 자리잡고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과제들은 각국에 공통된 것들이 도출되고 있다.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 개념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2.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교사 확충
3. 학생을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조력자로 보는 토론수업의 활성화
4. 안정적인 자본 조달
5. 제도권과 비제도권 시민교육의 연대
6. 객관적 평가방법 개발

토론을 거치면서, 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민교육의 공교육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듯, 시민교육 역시 자칫 그 존재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관심을 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규교과로 입법화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개탄하는 시민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민희*

최근 인터넷 토론 글 가운데 인상적인 표제를 본 기억이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짝한 과정을 겪고 성장해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 글을 쓴 이는 최근 촛불 시민운동의 선봉에 선 어린 ‘촛불세대’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지난날의 희생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요즘 중·장년층이 된 과거 민주화 주역들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를 잘 가꾸고 누리는 시민이 될 수 있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를 말이다.

지난달 14일(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08 시민교육 국제회의>가 열렸다.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일곱 명의 시민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국, 미국, 한국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시위를 통해 본 시민운동의 의미와 그 향방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제회의는 시기적절한 작업이었다고 본다. 이 글은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데 있다.

시민교육의 발생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민주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다. 사회학자 정수복은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아르케, 2002)> 서문에서 한국 민주화 발전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민운동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1990년대 들어서 시민운동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경제정의실현, 교육개혁, 환경보호, 남녀평등 실현, 장애인 권익보호 등 우리사회 여러 문제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중략)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 시민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게 된 것이다.” 모든 분야의 민주화가 시민운동이란 동력에 기대던 시절이 있었다.

홍윤기 교수의 일갈에 따르면, 한국은 맨땅에 헤딩한 지 60년 만에 국민총생산량 세계 12위에 올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오직 ‘삶의 아비투스(living habitus)’였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민교육이 전무했음에도,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과도한 교육열의 관성이 개인적 성향이 되어버린 현상을 교육의 아비투스라 말한 것 같다. 즉, 현재 촛불시민이 있게 한 동력은 시민들의 자생적 자기교육의 결과지 학교교육의 결과가 아니란 주장이다.

집단지성 ‘시민’

‘시민’이란 개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국민들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위키백과



찰스 키글리 미국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참고이다.

방송대 정민승 교수가 언급했다시피, 21세기 인터넷 세대인 ‘시민’을 집단지성이라 부를 수 있다. 집단지성은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지성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 번지면서 산업 분야에서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촛불시위’ 주도세력이 바로 이 집단지성으로 볼 수 있는 ‘시민’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소고기 수입정책과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인터넷 토론광장을 통해 공부하여 ‘전문지식’에 접속한 집단지성들이 들고 일어섰다. 과거 민주화 운동과 달리 평화시위를 1백일이 넘게 이어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보며 전문가들은 이 생경한 시민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세계의 시민교육

찰스 퀴글리 미국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은 미국 제도권 교육에서 행해지는 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의 가치관에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자신한다. “효과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은 학생들은 소양 있고 역량 있는 시민참여의 필요조건인 지적 기술과 참여 기술, 정치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기술이란, 각종 공공정책 사안들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옹호하는 능력을, 참여기술은 학생들이 정부의 각종 활동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활동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이른다. 미국 시민교육

의 목표는 한마디로 기술을 갖춘 똑똑한 ‘시민(enlightened citizenary)’ 육성이다.

교육 성과를 최대한으로 내기 위해서는 공식적 교육과정과 더불어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는데 미국식 시민교육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공식적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으로 학교수업은 해당 정치체제 참여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적 기술과 참여기술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더불어 비공식적 교육과정은 운영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로 학교 공동체 운영과 그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과 전달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영국 시민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습득하는 기술, 전달하고 설득하는 기술, 참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2년 9월 시민교육이 영국 중등학교 법정 기초교과로 신설되었고, 2003년부터 14세 학생들의 시민교육 성취도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학교에 부과되었다. 린 데이비스 영국 버밍엄대 교육학 교수에 따르면 영국 시민교육의 특징은 교육과정평가원(QCA)이 지난해에 발표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포용성, 평등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거리와 학습 분야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시민교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공식적인 시험이 생겼다. 교육기준청(OFSTED)은 각 학교의 시민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기 위해 15~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수료자격시험(GCSE) 단기 과정과 시험을 통해 시민과목의 위상을 세우고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시민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권리교육’이다. 인권과 아동권리 교육은 시민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니세프 영국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권리존중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에서 일선 학교들은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학교운영철학을 수립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즉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숙지하고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에게 존엄성과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교육을 받고 어린이 노동이나 착취, 어린이 매매, 어린이 학대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한국의 시민교육

한국의 시민교육은 현재까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했다. 홍윤기 교수의 표현처럼 그라운드제로에서 출발하여 전력투구로 단기간에 사회발전이 극복되었으나 그건 제도권



린 데이비스 버밍엄대학 교수

시민교육의 힘이 아니라, '자생적인 자기교육, 자기재생산교육'의 성과였다. 학교교육을 시민교육에 진입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협의회'의 발의가 지난 1997년에 있었으나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 1997년 결성한 '민주시민교육포럼'과 공동으로 민주 시민교육입법화를 추진하였지만 결국 결실을 얻지 못했다.

유일하게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독특한 조건으로 군사독재, 고속 경제성장, 민주화라는 한국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민중교육, 시민교육, 평생학습이 중첩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회고하고, 지난 2000년 이후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교육만으론 한계가 있고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송대 정민승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를 교육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른바 '우파정권'의 오류를 알아가는 과정에 시민들이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게 되고, '촛불집회를 통한 세대 간 이해',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이 기성세대로 전이되어 가고 딱딱하지 않고 웃음을 주는 '시위문화의 변화' 등을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인터넷이 토론의 장이 되고 그곳에서 지식을 쌓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시민에게서 '집단 지성'의 출현을 알리고 있다.

산본고등학교 사회과 김원태 교사는 '한국 학교 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실태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했다. 현장에서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로서 제도권 교육의 경직성과 민주교육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

